中·日·러도 '비핵화 분주'… 文 "한반도 새 질서"

김정은 방러·시진핑 방북 등
비핵화 통한 동북아 정세 개편
美, 北 핵실험장 사찰단 곧 파견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대두

평양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지난 8일 서울에서 수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북한, 한국, 중국 등 4개국 방문을 마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9일 트위터를 통해 비핵화 협상 진전에 노력을 다한 국무부 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북한 비핵화를 놓고 직접적 당사자인 남·북·미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가세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일 도쿄, 7일 평양과 서울, 8일 베이징을 각각 방문해 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가운데 주변국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채비를 갖추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들러 김 위원장을 만나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을 연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조만간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을 위한 사찰단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중국을 방문한 뒤 9일 본국으로 돌아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는 아직 최종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7일 서울을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난 뒤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이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는 정도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는 2차 회담의 대략적인 시기 등에 대해 어느정도 귀띔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2차 북미회담 개최는 실질적 비핵화 수순부터 종전선언 문제까지 미국과 북한이 합의를 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두 번째 만나는 만큼 지난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는 다른 진일보한 내용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차 북미회담 조기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중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북한과 소원했던 일본, 러시아도 김 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변국의 움직임은 실제로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자국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방문의 가능한 시기와 장소, 형식 등에 대해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 상세한 방문 내용이 합의되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북·러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올해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현지 소식통의 분석이다.

북한과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이 절실한 일본도 두 정상간 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을 다녀간 후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평양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과 회담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 우방국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정상간 만남 역시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벌써 3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이에 따라 이번엔 시 주석이 북한을 찾을 차례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번째 평양 방문에서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을 위한 사찰단 수용을 약속함에 따라 사찰단의 역할과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갈 사찰단의 기본 역할은 지난 5월 이뤄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며 "(현장 검증의)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실행계획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풀리는 대로 현장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혈세로 명품·외제차 구입한 청년농부"

정운천 의원, 농협은행 분석
44억 지원금 중 농업 소비는 5억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 일부가 명품구매, 주점 등 술집, 과태료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농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위와 같은 제품 구매 및 지출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올해 전체 예산은 83억 원으로, 8월말 기준 1099명의 청년농들의 사용실적은 13만1354건, 44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000명을 추가로 선발해 총 3600명에게 2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 의원의 조사결과, 8월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사용된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쇼핑 9억, 음식점 8억 원으로 조사됐다. 농업관련 분야는 사용된 실적은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 실적 내역을 살펴 본 결과, 명품 구매를 위한 200만원 사용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들어났다.

정 의원은 "농식품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더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고 꼬집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해수부 징계 35% 성매매·몰카 등 성범죄"

박주현 의원, 해수부 분석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수수, 성관련 범죄가 35%에 이르고 2018년 8월까지의 징계처분이 작년의 74%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실효성 있는 공직기강 확립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민주평화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향응수수, 성매매, 몰카, 공금유용, 절도 등 징계사유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처분별로는 음주운전 55명, 금품 및 향응수수 46명, 기타 품위손상 40명, 성 관련 범죄 10명 순이다. 징계종류별로는 경징계 120명(감봉, 견책), 중징계(파면, 해임) 39명으로 중징계가 24.5%나 차지했다.

박 의원은 "성 관련 범죄에 연류된 4명 중 2명이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으며, 최근 5년간 8명이 징계를 중복으로 처분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해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징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최대 쟁점 '부동산 대책'… 건설사 수장 줄소환

국토위 국감 D-DAY

부동산 대책 실효성, 여야 격론 예고
재건축 사업 관련 롯데·대우·현대 등

2018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10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정감사 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는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효성 등에 대해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약속 미이행 등의 이유로 소환되는 건설사 대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검증대 오르는 '부동산 대책'

9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는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에 대해 진행된다.

문재인정부에서 벌써 아홉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9·13 수요 억제 정책과 9·21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투기를 막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심리적 불안을 없애려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후 집값 급등세는 한풀 꺾인 모양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로 전주 변동률(0.35%)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야당은 국감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수도권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서울 집값이 폭등한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며 "시장을 무시한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거래활성화 없이 5년 이상의 장기 공급대책만 내놓은 것으로는 집값을 잡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대표 줄소환?

건설업계 CEO(최고경영자)의 증인 및 참고인 소환 여부도 눈길을 끈다.

현재 일부 건설사 대표는 하도급 문제 등과 관련해 정무위원회의 국감 증인 요청을 받은 상태다.

박상신 대림산업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오는 15일 하도급관련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같은 날 윤길호 계룡건설 부사장은 공정위 퇴직자 채용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증인으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중 하도급법 위반 사례 관련 증인으로 국감대에 선다.

국토위는 아직까지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선 10대 건설사를 비롯해 다수의 건설업체 CEO가 소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토위는 국감 마지막 날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대림산업,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표를 소환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4대강 입찰 담합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공사 입찰 제한을 추진하자, 건설사들이 이를 사면받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을 조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출연액이 부족해 올해 다시 국감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롯데·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은 각각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 반포 1·2·4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국감 증인석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K건설은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 시공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무너져 대규모 홍수피해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위에서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등으로 증인 및 참고인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달에 해외 출장을 준비 중이라는 대표가 많아 참석 여부는 그때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